

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
T/F 1차 회의

2019.10.8.(화)
10:00

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개선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

2019. 10. 8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금융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 현황	1
II. 문제점	2
III. 개선 기본방향	3
IV. 향후 계획	5
[참고1]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현황	6
[참고2] 소비자신용법 관련 해외사례	7

I.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현황

- 최근 매년 연간 약 260만명이 단기 연체채무자(연체 5~89일)로, 연간 26~28만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*(연체 90일 이상)로 등록

* 신용등급 급락(8등급 이하), 채무불이행 정보 공유로 금융·경제활동 제약

- 매년 14~1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·조정
- 공적 채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중 일부는 자력으로 변제에 성공하고 다수의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

※ (참고)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(약 1,900만명*)의 약 10%인 180~190만명 수준*으로 추정

※ 금융채무자 총 1,925만명 ('18년말 기준, 나이스평가정보)

* 신복위, 법원 개인회생·파산,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진행자 제외(약 150만명)

-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는 상당부분 정형화되어 있음(☞참고1)

- 연체가 일정 기간(통상 30일) 지속되면 기한이익을 상실*케 하여 원리금 전체의 일시상환을 요구

*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어 연체부담 급증

- 실제 추심은 추심사에게 위탁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외부매각하는데, 이후 채권은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
- 금융회사(매입추심업체 포함)는 회수되지 않은 보유채권에 대해 일률적·반복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*

* 민법상 소멸시효는 5년(상사채권)이나 법원(지급명령) 등을 통해 10년씩 반복적 연장 가능

II. 문제 인식

① '연체채무자'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 미확립

- 그간 연체채권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건전성관리 측면이 강조되었으며, 소비자보호 책임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
 - 현행 대출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는 모집·계약체결 단계에 치중*
* 광고 규제, 설명의무, 대출계약서 내용, 상환능력 심사, 최고금리 제한 등
- 연체 후 채권자-채무자간 법률관계는 민법과 약관에 따라 규율
 - 별도의 공적 규율이 미약한 가운데 금융권은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관리 관행을 형성
 - ▶ (현황) 금융권은 신복위/법원 등 법적절차에 따른 채무감면에는 협조적이나, 자체적인 채무감면 프로그램 등 마련·실시에는 소극적

② 최대한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채권회수 관행 형성

-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급격히 감소하지만, 추심강도와 상환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존재
- 이는 채무자의 추심고통을 배가시키고 상환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→ 채권자의 장기적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
 - ▶ (현황) 연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는 가운데 위탁·(재)매각을 통해 추심의 주체가 바뀌면서 추심강도가 지속 증가

③ 채무자의 개별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방식 지속

- 채무자별 상환능력 등 차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전략이 아닌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회수방식 고수
- 금융회사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방식이지만, 그 과정에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과도한 고통 유발
 - ▶ (현황) 통계적으로 전체 장기연체채권 중 실제로 일부 채권에서만 회수가 이루어지지만, 모든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일률적 추심 실시

➡ 금융권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에 저해하고,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함

III. 개선 기본방향

1 기본 전략

- ①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“유인구조” 설계
 - 일방적 금지·제한이 아닌, 채권자-채무자간 채무조정에 대해 협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 대안 마련 유도
 -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규제회피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
 - 합리적인 추심정도와 수준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추심 경향을 완화
- ②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도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등 채권자-채무자 모두 “win-win” 가능한 제도적 토대 마련
 -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확대에도 도움
 - 금융회사가 스스로 채무자 보호와 여신 건전성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가계신용 관리체계 마련을 지원
- ③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
 - 대출계약 체결부터 계약이행·종료까지 대출 소단계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율하고, 대출기관 뿐 아니라 추심업자에도 적용
 - 주요국 입법사례*를 참고하여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범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규율의 실효성 확보(☞참고2)

* 우리보다 먼저 소비자신용 규율을 마련한 미국, 영국, 유럽 등 해외 입법례

2 세부 검토과제

가. 채권자-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

- ☐ 채권자에 대해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 부과
 -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심사결과를 일정 기간내 통보하도록 의무화
 - 채무조정 여부·정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협의·결정
- ☐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하여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'채무조정서비스업' 도입

나.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

- ☐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(연체)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
 - 연체가 길어질수록 회수율이 낮아지고 실제 원금범위 내에서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, 다양한 대안 검토
- ☐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'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' 유도

다.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

- ☐ 추심위탁·채권매각 등에 따른 추심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채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 지속·강화
- ☐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(예: 위탁추심 vs. 매입추심)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하여 동일기능·동일규제 원칙 확립
- ☐ 채권추심·매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(예: 추심총량 제한)을 선별하여 법제화

IV. 향후 계획

가. T/F 구성

- ☐ (금융위원회) 사무처장(주재), 금융소비자국장, 서민금융과장(간사)
- ☐ (금융감독원) 은행감독국장, 권역별 영업감독팀장
- ☐ (외부전문가) 김영일(KDI), 박창균(자본시장연구원), 윤민섭(소비자원), 이규복(금융연구원), 이동진(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), 정성구(김앤장)
- ☐ (유관기관) 신용회복위원회, 자산관리공사, 신용정보원

※ 필요시 세부 논의주제별 이해관계자(업권별 금융협회 등) 참석 예정

나. 운영 일정

- ☐ ('19.10~12월) T/F 운영
- ☐ ('20년 1분기) T/F 논의결과를 토대로 「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」 발표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☐ ('20년下) 현행 「대부업법」을 확대개편한 「소비자신용법(案)*」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

* (현행) 대출계약 체결(대출모집 및 최고금리 등)

(개정안) 상등 + 이행(연체 후 추심·채무조정) + 종료(상환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)

- '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, 하위법규 마련 등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

① 기한의 이익 상실

- 금융회사는 대출금 연체 후 일정기간(통상 30일, 주택담보대출은 60일) 도과시 기한이익상실 처리(채무자에 대해 7일전 사전통보)
-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상환의무가 발생하고,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

② 채권 회수를 위한 (위탁)추심

- 연체발생 즉시 유선·우편 등으로 변제독촉(통상 위탁추심업체에 위탁) →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진행

③ 손실 확정을 위한 상각처리

- 통상 연체 후 1년(카드사의 경우 6개월) 시점에 부실채권을 '추정손실'로 분류하고 일정한 절차*를 거쳐 상각 처리

* 분기마다 금감원 승인을 거쳐 상각 (예외: 1천만원 이하는 자체상각 가능)

- 상각 후 부실채권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(난외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), 법인세법상 손금산입

④ 부실채권 매각

- 민법(§449)상 채권 양·수도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채권 추심업자(대부업자), 자산관리자 등에 매각
- 부실채권 매수자는 일정기간 추심 이후 재매각하는 것이 일반적

⑤ 소멸시효 관리 : 통상적으로 연장

- 소멸시효(5년) 완성 2~5개월 전 시효 도래자 조회 후, 법원에 지급명령*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연장(10년: 당초 5년 → 15년)

* 간소화된 독촉절차, 2주간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안하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

1. 개별 소비자신용법 제정 : 영국, 미국, 호주, 뉴질랜드 등

① (영국 : Consumer Credit Act 1974) 금전대부(Credit Agreement) 및 판매신용(Hire Agreement)과 관련한 대출계약 사항, 연체발생시 처리절차, 분쟁해결 절차 등 규율

- 관련업자(대출금융회사, 판매신용기관, 모집·중개, 채무조정 및 추심업자 등)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율 규정

② (호주 :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2009)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하며 Hardship Variation*이라는 고유의 채무조정 절차 규정

- *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할 의무 → 협상결렬시 제3자 중재기구(ADR)의 중재에 따르게 됨

③ (뉴질랜드 :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)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만든 법으로 호주법과 상당부분 유사

- '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해 금융채무자 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여* 채무자 보호 강화

- *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,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전체에 대한 가산이자 금지 등

④ (미국) 일반 소비자신용법*(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1968)과 채무조정업 규율법(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 2005)으로 2원화

- *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시, 공정한 채권추심,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등으로 세분화

2. 일반법 내 소비자신용 특칙 운영 : 독일, 프랑스 등

① (독일 : 민법상 소비자대차 章) 소비자신용법을 1990년 제정(1991년 시행) 후 2002년 민법에 통합한 것으로 영미권과 규율범위 유사

② (프랑스 : 소비자법 상 소비자신용 章) 과채무 해결을 위한 방법 및 비영리상담기구 등 소비자신용 단체 이용방법 안내(1978년 제정)

3. 민법상 채권자-채무자 일반론 적용 : 한국, 일본 등